

2025년 11월 8일 시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령(Ⅱ)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정답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1. 정답공개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15:00 이후
2. 정답공개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알립니다』에 게시
3. 이의제기 기간 /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사용자는 (나)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한 사람은 (다)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라)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나)	(다)	(라)	(마)
①	3	1	6	500	100
②	3	2	1	1,000	200
③	5	1	6	500	100
④	5	2	1	1,000	200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통보한 확정된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확정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통보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과 지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국무총리에게 연(年) 1회 이상 요청하여야 한다.

-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인력자원 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및 의료지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갖게 되는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③ 국무총리는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 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ㄷ.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ㄴ. 훈련기간은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ㄷ.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ㄹ.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통지서의 교부 및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ㄴ.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발부한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지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 ㄷ.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동시관리훈련과 관련하여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③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오늘은 2025년 11월 8일이며, 1985년 12월 8일 출생한 甲은 2018년 3월 1일에 A 산업대학에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에 있고, 乙은 2025년 6월 7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 30일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丙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10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었고, 丁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 &lt;보 기&gt;

- ㄱ. 甲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이지만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 ㄴ. 乙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수 있다.
- ㄷ. 丙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ㄹ.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丁은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A시의 시장 甲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하였고, 위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민방위 대원 乙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는 장애’가 남았다.

— <보 기> —

- ㄱ. 甲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ㄴ. 乙의 장애등급은 제4급에 해당하므로, 乙이 지급받게 되는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ㄷ. 乙이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고,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ㄹ. 장애 보상금을 지급받은 乙이 그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에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① ㄱ(O),      ㄴ(O),      ㄷ(X),      ㄹ(X)
- ② ㄱ(O),      ㄴ(X),      ㄷ(X),      ㄹ(O)
- ③ ㄱ(X),      ㄴ(O),      ㄷ(O),      ㄹ(X)
- ④ ㄱ(X),      ㄴ(X),      ㄷ(O),      ㄹ(O)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 민방위대의 동원이 명하여진 경우,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루어야 한다.
- ㄷ.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사이렌·타종(打鐘)·경적(警笛)·신호기,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수탁경찰서장에 의한 반상회를 통한 통지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 ㄹ.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모두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 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 대상 연령 단축의 심의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ㄹ.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며,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는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에 해당한다.
-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방공·의료·보건·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 ③ 민방위 대원이 20명인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같은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면·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나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ㄹ.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 및 점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ㄴ.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ㄷ.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ㄹ.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계의 대상과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만,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계	공습관계
ㄱ	일반 옥외등	옥외 다중(多衆) 집합장소등류 중 집회용 광장의 조명등	소등	소등
ㄴ	특수시설 옥내등	공장의 공장장실	소등 또는 차광	소등
ㄷ	특수시설 옥내등	학교 교실·교무실의 등화	소등. 다만, 야간수업 중 또는 열람 중인 경우에는 차광할 수 있음	소등 또는 완전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ㄹ	항공관계 등화	항공기등류 중 착륙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다만, 항공기 비상착륙이 불가피한 경우 착륙등의 경우에만 일시점등할 수 있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은 실시할 수 없다.
- ②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 ③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할 수 있다.
- ④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이 자신의 결혼식을 이유로 교육훈련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그 사유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 )월 ( )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69

② 71

③ 73

④ 75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하고,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②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함)이 발령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제품이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25. 민방위기본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甲에게 민방위 계획에 따라 민방위 준비를 명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 이하의 징역 또는 (나)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4]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중 개별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피호 등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 또는 부착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훼손한 乙에게는 (다)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ㄷ. 민방위 대장 丙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라) 이하의 징역 또는 (마)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u>(마)</u>
①	6개월	500만원	15만원	2년	2천만원
②	6개월	500만원	25만원	1년	1천만원
③	1년	1천만원	15만원	2년	2천만원
④	1년	1천만원	25만원	1년	1천만원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상 예비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령된 지역의 병참선(兵站線) 경비
- ㄴ. 무장 소요(騷擾)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할 수 없는 경우 중요시설 경비
- ㄷ.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의 무기고 경비
- ㄹ.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 ㅁ. 무장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할 수 없는 경우 무장 소요 진압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소집이 해제된 甲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 ②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乙이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乙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예비군에 조직될 수 있다.
- ③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인 丙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 ④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丁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 28.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예비군에 편성한다.
- ②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③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 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하지만, 「예비군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 ④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문 29. 예비군법령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 ②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7,000명 이하,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500명 이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③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비상사태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 ④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20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을 의미한다.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육군참모총장은 소속 군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전역인사명령서를 전역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④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ㄷ.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ㄹ.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2.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이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도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③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한 경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에는 동원을 연기해야 하며,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예비군은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제한없이 검문할 수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는 예비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한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4.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하여 예비군이 동원된 경우, 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ㄴ.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ㄷ. 예비군은 적(敵) 또는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ㄹ.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무장을 위하여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35.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역방위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므로 주민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④ 지역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 36. 「예비군법」상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 ) 안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을 고르면?

-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8                      ② 10                      ③ 12                      ④ 14

문 37.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ㄴ.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ㄹ.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심의하여야 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은/는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나)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라) 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나)	(다)	(라)
①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연도 2월 말일	1월 31일
②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전년도 12월 31일	2월 말일
③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해당 연도 2월 말일	1월 31일
④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년도 12월 31일	2월 말일

문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도안전관리위원회에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인이 된다.
- ㄴ.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그 위원에게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여비와 그 밖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ㄷ.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를 지명하여야 한다.

- ① ㄱ(X), ㄴ(O), ㄷ(O), ㄹ(X)
- ② ㄱ(O), ㄴ(O), ㄷ(X), ㄹ(X)
- ③ ㄱ(O), ㄴ(X), ㄷ(O), ㄹ(O)
- ④ ㄱ(X), ㄴ(X), ㄷ(O), ㄹ(O)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이며, 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는 차장·총괄조정관·대변인·통제관·부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부대변인으로 둔다.
- 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둘 수 있으며, 대책지원본부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ㄹ, ㅁ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ㄷ.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ㅁ. 안전기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ㄷ, ㄹ

문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가)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다)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라)(으)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3년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5
②	5년	100분의 1	100분의 10	100분의 10
③	3년	100분의 1	100분의 15	100분의 5
④	5년	100분의 5	100분의 15	100분의 10

문 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과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는 종합적인 재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의 효과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공무원 운용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한 후 승인받아야 운항할 수 있다.
- 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부단장, 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 및 구조지원부를 두어야 하며, 부단장은 소방청 차장이 된다.
- ③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는 각급통제단장이 한다.
-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방면현장지휘대는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문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문 4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의 처리가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②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③ 면책 대상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④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긴급구조활동 등의 업무 결과 발생한 피해가 경미할 것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2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상 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 및 재난안전의무 보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공제회비의 전부 및 보험·공제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등이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사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작 즉시 문제 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